

위험

하면 멈출 권리!

작업중지권!

10,479명

82.7%

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
(2020년~2024년, 사고성, 질병성 포함, 근로복지공단)

작업중지권 있어도 못쓰다
(2024, 민주노총 건설노조 설문, 상위 10개 건설사 1,660명 참여)

산재사망 1위
산재공화국 한국

유명무실한 권리 작업중지권

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주나 관리자 주변 분위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거나 작업을 중단했다가 회사 측의 징계, 해고, 손해배상,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에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.

99.8% "일하다 위험할 때 작업중지 권리 보장되어야 한다."

(2025, 민주노총 설문조사)

절실하다! 작업중지권!

안전한 곳에서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열망입니다.
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목숨값을 저울질 할 수 없습니다.

작업중지권, 노동자 참여 실질화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운동

기간 : 10.20.(월) ~ 11.20.(목)

일터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·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
산업재해예방에 참여하여 노동자의 눈으로 안전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합니다.
노동자·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

입법
촉구
선언

하나, 모든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·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하라
하나, 하청·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임금 및 손실보전 법제화하라
하나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·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라
하나, 하청·특수고용·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안전예방 참여를 법제화하라

선언 링크 : <https://bit.ly/산안법개정촉구선언>

※ 선언 서명은 11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로 전달할 예정입니다.



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?

노동자 사망 사고 여전히...
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

상반기 산재 사망 287명
인 미만 사업장 증가

생명·안전 지키는 작업중지권 보장!

추락하고 깔리고 매몰되고...
작업장 사망사고 올해만 19건

산업재해예방은

노동자·노동조합 참여로부터

노동자·노동조합이 나서니 일터의 안전이 지켜졌습니다.



제조업 노동자
금속노조
현대중공업

- 중대재해 지속적 발생, 노조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단체협약에 **'작업중지권' 명시**
- 노동조합이 **작업중지권을 행사**하여 추락사고·설비 사고 등 작업 중단
- 위험발견시 모바일/핫라인 신고, 긴급복구반 현장 즉시 투입 등 선제적 조치



콜센터 노동자
공공운수노조
서울시 120다산콜센터

- '원스트라이크 아웃' 도입 악성 민원, 폭언 등에 노출된 콜센터 노동자가 바로 통화를 끊고 전문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
- 반복 피해·심각한 감정노동 손상 예방, 상담사 이직·번아웃 감소 등 효과



대형 마트 노동자
서비스연맹
마트노조

- 고객 폭언·모욕, 성희롱 등으로 노동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지는 사건 발생 후 산재로 인정
- 마트노조가 **"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작업중지 및 피해지원 조치"**를 사업장에 요구
- 작업중지권에 보호 매뉴얼, 감정노동 피해 신고 및 즉시 업무 중단 가능

노동자·노동조합이 노동안전·산업재해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.

대통령 말 한마디로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!

“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. ”



안전한 일터를 위해 꼭 바뀌어야 합니다!

- ☑ 특수고용노동자 안전은 원청의 책무
- ☑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예방 전담부서 설치
- ☑ 작업 중지 후 발생하는 임금 및 손실 보전
- ☑ 산재예방활동시간 유급보장, 하청·특고·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
- ☑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적 설치 및 원청기업의 부당 개입 차단 대책 마련